

與 “민간인 사살 용납 못 해”...野 공세는 차단

“공무원 피격사건 김정은 전적 사과 최악은 피해 국민의힘, 장외집회·현안 질의 요구는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 총격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차분한 대응 자세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적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북한이 이날 우리 정부를 향해 ‘해상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라’며 경고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준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제한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북한 전문분야는 김 위원장 사과와 사건 경위가 포함돼 이례적이며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사건 경위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조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정 대응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태도가 남북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25일 “우리가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경위설명, 사과표명, 재발 방지 등이 담긴 답변이 온 것은 발전된 것”이라며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이유든 비무장 민간인 사살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도 “(북한의) 즉각적인 답변과 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앞 장외집회를 포함한 총공세에 나서려는 데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긴급 현안질의 등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3년 우리 국민이 월북 시도 중 초병 사격으로 사망했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당시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며 “이처럼 남북관계는 대단히 미묘하고 상호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본질을 벗어난 정치공세가 이어지는 이상 상임위나 본회의에서의 현안질의를 진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안질의 거부는 진실 은폐”

‘실종 공무원 피격’ 오늘 상복 차림 의총 개최

국민의힘은 27일 북한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하지는 우리 요구를 즉시 수용하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또 청와대에는 남북 공동 조사 관철을, 외교부에는 유엔 안보리 회부를,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경계태세 강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적 대응을 각각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정부냐”라며 “정부-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 가”라고 질타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여전히 침묵하는 대통령에게 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긴급현안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왜 무참하게 살해됐는지 위촉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이 요구하는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28일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등 상복 차림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온 안철수 “새 방역지침 필요”

북구 말바우시장 방문 성수품 구매·상인 애로 청취



말바우시장에 간 안철수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장을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빠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날 권은희 의원과 함께 시장을 찾았다.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광주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정부가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아 ‘무조건 금지·폐쇄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과도하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최소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정부에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 공연을 계속 막을 수 없으니 정부에서 실내에 사람들이 많아있을 때 공기 흐름을 조사하고, 어떤 형태로 공연을 열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최소화되는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안 대표는 추석 대목을 맞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안심한 말바우시장’을 홍보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뒤 장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밥집에서 식사를 하며 어려운 사정을 경청하고 위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긴급 현안 질의 진행 이견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27일 이견 조율을 모색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저녁까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반 논의를 긴밀하게 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앞 시위를 광화문 앞 집회든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들어가 버

렸다”며 “저희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8일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 브리핑을 받고, 남북 공동조사위 추진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각 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애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미 상임위별로 질의가 이뤄졌음에도 국민의힘이 추가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장외부쟁이가 지 나서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영진 수석은 “정쟁의 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아 규탄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현안 질의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너무 쉽게 (장외부쟁을) 선택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선관위, 김홍걸 의원 검찰에 수사 의뢰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 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하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된 뒤 신고한 재산이 총선 전 재산 신고액보다 11억원 이상 늘어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 통보’했다. 선관위는 통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종결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의원의 경우 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있어 수사자료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의사 성범죄, 면허취소법 제정 앞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

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범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됐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